

제 4 장 접경지역의 도시지정학: 경기도 파주시 대북전단살포 갈등을 사례로_이승욱

요약

1. 들어가며: 한반도의 도시지정학?

한반도 지정학은 주로 국가 스케일에 집중했고, 도시와 같은 미시적 스케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 기존의 도시스케일 접근조차 '국가 vs 지역'이라는 대립구도에 국한되어 있다. 이 맥락에서 도시-로컬 스케일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며, 이 과정에서 안보를 둘러싼 담론과 실천이 어떻게 경합하는가에 질문한다.

연구방법은 아카이브 연구와 반구조화 인터뷰인데 언론기사, 공공-민간단체 성명서, 시-도의회 및 국회 청문회 회의록 분석하며, 지역언론-사회단체 관계자, 반대시위 참여 시의원-종교단체-주민-상인 대표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다.

2. 지정학의 새로운 지평, 도시지정학

2.1 도시지정학의 등장과 발전

Saskia Sassen(2012)은 지정학 공간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행위자들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도시의 세기' 담론이 등장할 만큼 전 세계적 도시화가 확산되고 도시가 핵심 장소로 부상했다. 둘째, 냉전 후 '지정학의 종언' 담론이 잠시 등장했으나 2001 년 9/11 테러 이후 새로운 형태의 지정학적 갈등이 서구 도시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Stephen Graham, Neil Smith, Graham 등 학자들이 선도적으로 여러 주장을 제기하였는데 세 가지 한계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서구중심성이다. 둘째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과잉 강조이다. 셋째는 도시스케일에 대한 협소한 천착이다.

대안으로 Fregonese(2012)는 냉전 전후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복합적 권력관계를 반영한 **하이브리드 주권(hybrid sovereignties)** 개념을 제시하였다.

3. 접경도시의 지리정치경제학

일반적으로 탈경계화(de-bordering)는 지경학적 상상력과 결부되어 이해되어 왔지만 대북전단살포와 같은 탈경계화 시도는 새로운 주체에 의한 지정학적 욕망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접경도시로서 파주는 시기에 따라 진자운동을 거쳐왔다. 냉전기 안보적 기능이 지배적인 공간이었으며, 군사적 최전선인 동시에 기지경제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DJ, 참여 정부 때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를 매개로 새로운 지경학적 가능성이 부상하였다. 후에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개성-금강산 특구는 모두 중단되었고, 접경지역은 다시 지정학적 갈등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회귀하였다. 실제로

변화한 것은 안보와 개발의 관계, 즉 안보-개발 넥서스(security-development nexus) 자체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비전을 흔든 것은 국가 스케일의 지정학적 긴장, 즉 북핵실험과 같은 사건만이 아니었다. 2000 년부터 시작된 탈북자단체, 극우집단, 미국 인권단체 등에 의한 대북전단살포라는 비국가 행위자의 개입이 접경지역에 새로운 긴장을 초래하였다.

4. 한반도 접경지역의 도시지정학: 파주시 대북전단살포를 둘러싼 갈등

4.1 한반도 접경지역과 대북전단

이 부분은 한국 대북전단의 역사적 흐름과 파주 지역 주민들의 안보의식 고착화 과정을 다룬다. 전단은 한국전쟁기 심리전의 핵심 도구로 '들리지 않는 총성'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전후에도 체제경쟁과 냉전의 상징적 장치로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용해왔다.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보의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경기-강원 접경지역은 선거에서 오랫동안 '안보벨트'로 불리며 보수정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4.2 대북전단살포를 둘러싼 세 가지 층위의 지정학적 동학

파주에서 나타난 갈등을 세 층위로 분석할 수 있다. ① 전단살포집단 vs 반대집단의 정치; ② 중앙정부의 입장과 대응; ③ 지방정부의 대응이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국가 중심 지정학을 넘어 '일상생활의 지정학(everyday geopolitics)'을 지향을 제기한다.

5.결론

이 논문의 결론에 대해 정리하지 않았는데, 대신 한 문장으로 전체 논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글쓴이는 파주 지역을 사례로 대북전단살포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두 가지를 보여주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의 연구 스케일은 국가, 서구 도시 등 거시적이고 서구중심적인 서사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각종 단체의 대북 정치적 선전은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의 적대적 반응을 자극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발제문

본 논문은 기존의 관점과 달리 개인적으로 이 논문은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래 몇 가지 측면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시기입니다. 시점상 이 논문은 2018년 10월 1일 투고되었는데, 남북 양측이 9·19 공동선언에 서명한 지 한 달 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 "지난 9월 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와 같은 서술이 등장하는 것이며, 이는 저자로 하여금 남북관계와 접경지역 정세의 완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또한 저자가 "4.2 대북전단살포를 둘러싼 세 가지 층위의 지정학적 동학" 부분에서 대북전단의 역사, 지원, 부정적 결과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게 만든 배경이기도 합니다.

논문의 논리 전개 방식에 있어 저자는 주로 인과적 논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통계적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논문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인상과 함께 다소 주관적인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2에서 "특히 임진각의 경우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크게 줄었고, 통일동산에 위치한 식당들은 주말 서울 등 수도권 등지에서 오는 관광객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라는 문장은 구체적인 수치 비교 없이 곧바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저자의 뛰어난 사건 간 인과관계 분석 능력 덕분에, 논문 전체의 논리는 여전히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론 도입—도시지정학 개념 정리—이론에 대한 비판과 전망—파주 대북전단 사례분석—결론"으로 이어지는 전체 구성은 완결되고 유기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논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서구 중심"에 대한 논의와 비판에 있어 저자는 대부분의 지정학-정치지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비서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서구 중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비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분법적 대립"에 빠지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서구든 동양이든, 혹은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 등 어느 지역이든 모두 평등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가 비판해야 할 대상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중심주의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시들은 각종 안보 관련 장치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반면,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 따라 아랍의

도시들만이 표적화된 분석대상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Fregonese, 2017, 2). 이를 위해 저는 Fregonese 의 영문 원문을 찾아보았는데, 해당 문장은 "Relatedly, Arab cities feature recurrently as the orientalist target grounds of the war on terror, as opposed to a category of 'our' cities which need protection via other securitisation apparatus"였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반테러 전쟁" 담론 속에서 아랍 도시들은 종종 오리엔탈리즘적 방식으로 테러리즘의 발원지이자 군사적 타격 대상으로 묘사되는 반면, 서구 도시들은 안보화 장치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도시"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지정학은 연구대상과 문제의식에 있어 뚜렷한 서구중심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도시지정학 연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같은 소수의 고도로 군사화된 사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지리적 분석 스케일을 접경지역으로 하향시킨 관점과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대상으로 접경지역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이 사례의 선택 자체, 혹은 이러한 사례에 이러한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경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적어도 경계 양측의 두 대상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DMZ 북측의 상황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이른바 북한인권 연구, 정치경제 연구 등등을 포함하여 "북한"이라는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